

선거명	제19대 국회의원선거		선거구명	대전광역시 서구갑	
후보자명	박병석	기호		소속정당명	새누리당
공약번호: 1	공약 제목 : 대전 동구 도시철도 2호선 지하화 관철,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역세권 개발의 강력한 추진				
<p>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세종시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이명박 정부의 세종시 무산시도에 맞서 500만 충청도민과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전국의 뜻있는 분들의 힘을 모아 지켜냈음.</li><li>- 2012년부터 시작되는 정부부처의 이전과 연구기관의 이전의 정상적인 추진이 매우 중요.</li></ul></li><li>○ 과학비즈니스벨트 역시 이명박 정부의 공약폐기에 맞서 충청도민들의 힘을 모아 지켜냈음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국책사업인 국제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성공적 조성을 위해 거점지구 사업인 기초과학연구원 및 중이온가속기 등 관련예산이 당초계획대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함.</li></ul></li></ul> <p>=&gt; 세종시 건설과 과학벨트 조성은 대전발전의 획기적 전환을 이룰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야 함.</p> <p>공약</p> <p>◆ 세종시에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 분원 설치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정부기관과 연구기관의 차질 없는 이전 및 자족기능 확충</li><li>○ 과학벨트 관련 예산 확보</li></ul>					
공약번호: 2	공약 제목 :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체계 혁신				
<p>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○ 대전의 시내버스 통행속도(17km/h)가 승용차(25.3km/h)보다 현저히 낮아 대중교통 경쟁력 확보 필요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1호선 수송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, 타 도시와 비교할 때 도시철도 연장이 짧아 지역균형 차원에서도 서비스 확대 필요</li></ul></li><li>○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라 충청권 철도망이 2016년에 착수하도록 되어 있음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세종시 및 과학벨트 조성 등과의 연계효과를 높이기 위해 착공시기를 앞당길 필요성</li></ul></li><li>○ 2014년 호남KTX 전용선 1단계(오송~광주) 구간 완공(오송역 분기) 이후에서 대전권 이용객 편의 제공을 위해 현재 수준 이상으로 서대전역을 경유토록 추진</li><li>○ 도안지구 2단계 개발 사업이 지연됨에 따라 도안대로가 단절되어 있음.</li></ul>				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도안신도시(1단계) 입주에 따른 교통정체 구간이 발생되고 있어 이의 해결이 필요.</li> </ul> <p>공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지원</li> <li>o 논산~대전~세종~조치원~청주공항을 연결하는 충청권 철도망의 조기 착공</li> <li>o 2014년 이후에도 서대전역에 KTX 경유 강력 추진</li> <li>o 도안지구의 교통 체증 해소를 위해 도안대로 조기건설 추진</li> </ul>	
공약번호: 3	공약 제목 : 경제민주화 실현, 소상공인·영세자영업자 자생력 강화
<p>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 정권이 감세정책을 시행하였으나 소비지출과 내수확대는 부진하고 투자와 고용 증가효과는 나타나지 않음.</li> <li>-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만 증가시키는 결과 초래.</li> <li>o 중산층 붕괴, 빈곤층 확대로 나타나고 있는 사회 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해 부자감세 철회와 1% 슈퍼부자에 대한 증세를 통해 99% 서민행복을 실현하고 조세공평성 제고할 필요성 증대.</li> <li>o 이명박 정부의 수출 대기업 위주의 성장정책으로 인해 대/중소기업 양극화는 더욱 심화되고 있음.</li> <li>- 대기업의 불공정 거래와 하도급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날로 악화되고 있고 대/중소기업 상생발전과 동반성장 기반 자체가 흔들리고 있음</li> <li>o 경기상황의 악화와 대형마트,SSM 등의 영향으로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붕괴위기에 처해 있음. 이의 대책 필요.</li> </ul> <p>공약</p> <p>1. 경제민주화 실현!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한국형 버핏세인 1% 슈퍼 부자 증세 추진</li> <li>- 대·중소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 엄단과 공정한 하도급 질서 정착</li> </ul> <p>2. 소상공인·영세자영업자 자생력 촉진!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형마트, SSM 규제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통해 골목상권 보호</li> <li>-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지속 추진</li> <li>- 음식업자의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 우대공제 지속</li> </ul>	
공약번호: 4	공약 제목 : 민생문제 최우선, 일자리 창출·안정화
<p>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한국경제의 최대과제는 일자리 창출.</li> <li>- 일자리 창출이 최고의 복지정책이고 질 좋은 성장정책이며 국민화합정책</li> </ul>	
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청년실업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이의 해결을 위한 노력이 필요.</li> <li>o 정규직을 확대하고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시정을 통해 고용의 질을 대폭 개선할 필요성 제기되고 있음.</li> <li>o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교육, 주거, 일자리, 사회보장 정책의 확대 공약</li> </ul> <p>1. 일자리 창출, 안정화!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 해당 지역 출신 채용 할당제 도입</li> <li>- 공공기관, 대기업의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도입</li> <li>- 중소기업의 신규 인력 고용에 대한 지원 강화</li> <li>- 청년실업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추진</li> <li>-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급과 차별시정</li> </ul> <p>2. 민생문제 최우선!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대학생 등록금 대폭 인하 추진</li> <li>- 교육예산 확대로 공교육 강화</li> <li>- 전·월세상한제 도입을 추진하고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임대료 보조</li> <li>- 공공 임대주택 건설 확대</li> <li>- 학교 회계직의 정규직화 지원과 호봉제 도입 추진</li> </ul>	
공약번호: 5	공약 제목 : 행복한 서구, 발전하는 서구 - 여성·아동·어르신 복지 증진
<p>현황 및 문제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o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낮은 수준(10년 출산율 1.23)이며, GDP 대비 영유아 보육교육재정 비율은 0.6% 수준으로 OECD 권고 수준인 1%에 훨씬 못 미침</li> <li>-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 양질의 교육을 받도록 해야 함.</li> <li>o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</li> <li>-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70% 노인에게 월 9만 원대 지급</li> <li>-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대비하여 노인 건강과 노후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.</li> <li>o 또한 교육환경 개선 지속 필요성이 있고, 공원, 체육시설 확충, 공원 등산로 정비를 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 필요.</li> </ul> <p>공약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민간보육시설의 실질적 지원 강화와 취약지역에 국공립시설 확충</li> <li>- 보육교사 등 보육종사자 처우 개선 향상</li> </ul>	

- 기초노령연금 인상 확대, 노인틀니 건강보험 급여화 확대
- 노인 일자리 예산 확대
- 노인 복지회관 신설, 경로당의 확충과 경로당 난방비 지급 지속
- 장애인 연금 현실화 등 장애인 생활 보장 강화.
- 학교 급식실 현대화, 다목적 강당, 학교도서관, 운동장 등 교육환경 개선
- 재정비 촉진지구의 민간사업 유도를 위해 기반시설비 국비 지원 확대
- 게이트볼장 확충, 공원·등산로 정비 지속 추진

재원조달방안

- 부지매입비 국비 400억원, 시비 450억원
- 공공체육시설설치 지원예산 1,150억원